

인권정보자료실
G1.76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 일 시 : 2001. 2. 16 ~ 19

■ 장 소 : 제주 중림콘도

■ 주 최 : 한국인권재단

■ 후 원 :  POSCO

 한국가스공사

 한빛은행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 일 시 : 2001. 2. 16 ~ 19

■ 장 소 : 제주 풍림콘도

■ 주 최 : 한국인권재단

■ 후 원 :  POSCO

 한국가스공사

 한빛은행

안보개념과 국가주의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국가의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 인간의 안보가 제도적으로 유지되었던 전통적인 논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비군사적인 안보가 군사적인 안보보다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비군사적인 안보가 군사적인 안보와 갈등을 일으켜서 안보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가 개인의 갈등도 증대하여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안보를 보장해주기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모색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1990년대에 새롭게 대두된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에 입각한다면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온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안보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서 어떠한 규정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인 안보논리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한국의 상황에서는 인간안보라는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개선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속에서 안보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대하여 관련 학문 사이에 그리고 부문 운동 사이에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국가안보

1) 국가안보의 기본개념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온 것으로 'se'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된다" 또는 "어떤 것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curitas'의 어원인 'cura'는 공포, 불안, 근심이나 피해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뜻한다.¹⁾ 이러한 어원에 따르면 안전보장이란 "위험이라든가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공포, 불안,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모호한 상징'(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이라고 지적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안보를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결론짓고 안보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리한 배리 부잔(Barry Buzan)은 안보개념 자체를 '저개발된 개념'(underdeveloped concept)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안보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 둘째, 안보개념이 힘의 개념과 혼용되어 연구되었다는 점, 셋째, 이상주의자들은 안보개념보다는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는 평화의 개념을 택하였다는 점, 넷째, 안보개념이 전략연구와 결부되어서 패권국의 현상유지유지적인 성향만을 반영하였다는 점, 다섯째, 정치가들이 정권에 악용하고자 의도적으로 안보의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등이다.²⁾

1) 조범순, 송택구 "현대안전보장정책론" (인간사랑, 1990) 13쪽

안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셉 발라즈 : 국제안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체계의 내적 외적 안보에 의해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그 체계의 일체성이 외부적 상황에 달려 있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안보를 그 내부적 안보라고 정의한다. 핵심기능은 주어진 지배계급의 정치 경제적 권력, 혹은 사회체계의 생존과 적당한 정도의 공공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안벨라니 : 안보 그 자체는 전쟁으로부터 상대적 해방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교적 높은 기대를 의미한다.

페넬로프 하틀랜드턴버그 : 국가안보는 한국가가 필요하다면 세계 어디서나 그 국가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윌터 리프만 : 국가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그 핵심이익을 희생해야하는 위협에 처하지 않는 한, 또 핵심이익이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를 지킬 수 있는 한 안전하다.

마이클 루 : 국가가 하나의 정치체로서 생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내부적 국제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군사적 행동도 포함한다.

자코모 루치아니 : 국가안보는 해외로부터 침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놀드 윌퍼스 : 안보는 객관적 의미에서는 취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 주관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부재를 측정한다.

안보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가 안보라는 이름을 붙일만큼 긴급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일상생활에 예상외로 불확실성인지를 정하는 것 또한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의 하나이다. 안보란 주로 인간집단의 운명에 대한 것이고 특정 개인의 안보는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체제에서 안보의 기준단위는 주권영토국가이다.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란 “국가가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 또는 그로 인한 공포, 불안 및 근심걱정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는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억제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임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독립을 책임져야 했다. 국가는 최소한 상대국과 동등하거나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은 군사방위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군사적 차원에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한 국가적인 노력을 국가안보로 총칭했던 것이다. 물론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도 다르기 때문에 안보개념 추상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체로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지배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안보의 중요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전쟁과 평화의 조건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은 국제사회가 무정부적인 질서이고, 힘의 행사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세력균형이론으로 정리되어왔다. 세력균형체제는 항상 국가간의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

2) 베리부잔, "People, State and Fear", 김태현 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나남출판, 33-38쪽

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군사력이다. 주권국가는 국가의 안보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군비경쟁으로 이어진다.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논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된다.

2) 국가안보개념의 이론적 배경

(1).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론

‘힘의 균형’ 이론은 홉스(Thomas Hobbes)가 상정하고 있는 자유경쟁적 질서, 국제질서의 무정부적 성격을 기본전제로 한다.³⁾ 힘의 균형 이론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질서는 自助체계(self-help)이므로 모든 행위자들이 스스로 행위를 규제하고, 각국의 관심은 국제사회의 평화가 아닌 국가체제의 유지이며, 국제질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또한 무정부 상태는 각국에 행위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국가간의 힘의 분포는 변화하여 강한 나라가 약소국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무정부적 국제질서속에서 행위자인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유리한 불균형한 힘의 분포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하므로 그 의미는 더욱 모호하고 상대적이 된다. 즉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선언할 때는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 “(미국이) 원하는 힘의 균형이란 자국이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타국을 중립화시키는 그런 균형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국가행위 시스템으로서 힘의 균형에 대해서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여러 국가가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든가 계속 유지시키려 하게되면 그 결과로서 힘의 균형이라 불리우는 질서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모겐소의 힘의 균형이론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조절되는 것과 같은 자동적 균형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힘의 균형 이론에서 불안정은 한쪽이 세력의 우위를 얻었을 때 발생한다. 힘의 균형의 상태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들이 현상유지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력이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전쟁은 그 절대비용이 높기 때문이다.⁴⁾

힘의 균형 이론은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⁵⁾ 힘의 균형정책은 핵심

3) 하아스(Ernst B. Haa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란 대체로 여덟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 단순한 힘의 분포상태(situation)를 기술하는 말
- 힘의 평형(equilibrium) 상태를 뜻하는 경우.
- 역설적이지만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주도권(hegemony)을 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
- 안정(stability) 또는 평화의 의미
- 불안정, 전쟁의 의미
- 일반적인 힘의 정치
- 역사의 보편적 법칙
- 시스템 또는 정책입안의 지침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79), 225쪽

4) 야식 쿠글러(Jacek Kugler), 오겐스키(A.F.K. Organski), ‘세력전이 : 회고와 전망’, 김우상 등 “국제관계론 강의” (한울, 1997), 205쪽

대에 이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국한되고, 약소국은 힘의 균형정책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논리에 불고하다. 핵시대에는 약소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강대국에 이익이 보장되는 힘의 균형을 동요시키므로, 강대국은 핵독점에 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힘의 균형정책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군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힘의 균형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2)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이론

국가간의 힘의 배분 상태를 정치시스템으로 설명하며, 그 속에서의 각국의 기대행위를 설명하려는 세력균형이론이 한 시점에서 국제정치시스템을 다루는 정태적 이론이라 한다면 오간스키(A.F.K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간의 힘의 배분상태의 변화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는 국제정치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양상을 기초로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오간스키는 전쟁의 원인을 국제정치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는 힘의 크기에 따라 최강의 재배국가로부터 최약의 종속국가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나뉘어 있는 위계질서에서 일정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데, 전쟁은 국제정치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강대국과 이 지배권에 도전하는 신흥강대국간의 비대권쟁탈전 형식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본다.

오간스키의 힘의 전이이론은 기본전제는 첫째, 국제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가 아니고 국내정치체제와 유사한 위계적 방식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보고,⁶⁾ 둘째, 국제정치질서는 가장 강한 국가와 그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군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셋째, 국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힘의 전이 이론은 국가의 본질적, 보편적 속성은 지배욕이며, 국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전제하에 국제정치질서의 변경을 상정하고 이러한 변경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현재의 지배국과 이에 도전하는 피지배의 신흥강대국간의 대결로 전쟁의 발생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국력의 변화에서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오간스키는 1단계로 잠재적 힘의 단계(the stage of potential power), 2단계로 힘의 전환적 성장단계(the stage of transitional growth in power), 3단계로 힘의 성숙단계(the stage of power maturity)를 거쳐서 산업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힘의 전이이론은 이러한 단계 가운데 전환적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와 힘의 성장기에 접어

<표1> 힘의 균형이론과 힘의 전이이론

	힘의 균형 이론	힘의 전이 이론
분석 방법	현상에 대한 정태적 분석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국제질서 시각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파악	무정부적 성격보다 위계적인 성격 강조
국가목적	세력을 극대화	순이익을 극대화
전쟁조건	세력의 불안정	위계질서의 변화
평화조건	세력간의 힘의 균등화	세력간의 힘의 격차

표 1

든 국가와의 힘의 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을 포착하여 여기서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관해서 오간스키는 “평화는 강대하며 현존질서에 만족하는 강대국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의 힘이 도전세력의 힘보다 훨씬 강할 때, 즉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힘이 너무 강대하여 어떠한 군사력 도전으로도 현실개혁을 바랄 수 없게 될 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불만을 가진 도전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힘이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힘과 거의 균등해질 때 전쟁의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말하고 있다.

힘의 전이이론에 따르면 전이(轉移, transition)란 도전자가 지배국을 따라잡고 능가하는 추월과정을 언급하기 위해 쓰인다. 선진국들이 전이를 겪는 국가들에 의해 따라 잡히는 이유는 성숙한 선진국들이 발전을 통해 획득한 잠재적인 권력을 이미 소모해버렸기 때문이다.⁷⁾

힘의 전이이론에 따르면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규칙과 이익의 분배에 만족하는 강대국들이 지배국을 지지하는 동맹을 형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한다. 국제적 위계질서에서 불만족스러운 당사자가 현상유지보다는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때 더 큰 이익과 특혜를 얻을 것을 기대한다면 경쟁이 일어나고, 지배국가는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면서 전쟁이 발발한다.

오간스키의 이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지배국과 그 이하의 국가들과 힘의 격차가 클수록 국제질서는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배국, 강대국 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보 딜레마

세력균형이론이나 힘의 전이 이론은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은 점차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고, 식량, 자원, 환경문제등 비군사적인 요소들과 관련한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군사력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한 국가가 군사력을 증대하면 상대국에 불안과 위협을 증가시켜서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촉발시키는 방식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군비경쟁을 가속시킨다. 군비경쟁을

7) 김우상, 앞의 책, 207쪽. 이러한 개념은 이른바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중대한 자취를 남겼다. 길핀(Gilpin)은 거대한 국가들이 초기에 세력을 증가시키지만 일단 성숙한 패권국(hegemon)이 되면 쇠퇴하게 된다고 본다.

5) 힘의 균형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시각은 오늘날 억지이론에서 상호확증파괴(MAD)가 예증하는 것 처럼, 핵전쟁국들이 핵전쟁의 절대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갈등의 개시를 단념하게 될 때 국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6) 야식 쿠글러(Jacek Kugler), 오간스키(A.F.K. Organski), 앞의 책, 201쪽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서 국가안보에 오히려 손실을 가져온다.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경쟁국의 힘의 성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증강시키고 이로써 경제적 쇠퇴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체제붕괴의 위협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군사력 중심의 안보논의가 이러한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면서, 국가안보의 영역이 군사문제에서 점차 비군사 문제인 경제, 사회, 환경, 자원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다.

1980년 브란트 위원회 보고서(The 1980 Report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는 안보논의의 확대를 시작한다.⁸⁾ 브란트 위원회는 빈국과 부국 사이의 긴장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세계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경제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초로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제안하였다.

이어 1982년 팔메 위원회 보고서는 “본 위원회는 국가들이 서로의 희생을 토대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력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고 믿는다. 공동안보는 인간들이 평화속에 살기를 원하며 그들이 충분히 먹고 일을 하며 빈곤과 결핍이 없는 세계속에 살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⁹⁾

팔메 위원회에서 제기한 공동안보란 “국가들 더 이상 서로의 희생에 의하여 안보를 추구할 수 없으며 단지 협동적 활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가경제를 뛰어 넘는 국제적 문제의 대두, 핵전쟁 방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등 이제 국가들은 자신의 이해만이 아니라 공동이해속에서 공동적인 번영을 누릴 필요성이 있다는 새로운 국제정치관점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더 이상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없다는 뜻으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수정하는 것이다.

1983년 일본의 국방백서는 식량,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¹⁰⁾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 보고서(The Brundtland Commission report)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한 한계는 이와같은 안보개념의 변화를 가져왔고 1990년대에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3. 인간안보

1) 배경과 개념정의

1993년에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 시점이 냉전종식과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리우환경회의 직후라는 것이 인간안보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인간안보는 탈냉전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기본 구성단위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라

8) 1980년에 유엔은 안보문제와 더불어 국제경제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세 개의 독립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것이 바로 브란트 위원회, 팔메위원회, 부룬트란트 위원회이다.

9) 김면, ‘공동안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20쪽

10) 포괄적 안보는 1977년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발상과 이들에 대한 안보 없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의식전환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는 개인에게 위협도 되고 안보도 부여하듯이, 개인은 국가의 존재이유인 동시에 국가안보의 추구에도 방해가 된다.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서도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자신이 개인에 대한 위협의 근원이 된다”는 점이 다루어졌다. 11) 국가의 개인에 대한 위협은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데서 오는 위협,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하는 직접적인 행정 경찰활동에서 오는 위협,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투쟁에서 오는 위협, 국가의 대외안보정책에서 오는 위협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결국 다시 국가가 폭력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즉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안보는 국가안보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인간안보란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인간 중심 개발을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안보, 식량안보 등 다양한 개념이 파생된다. 환경안보란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환경위기가 전지구적 안보, 국가적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환경위기를 안보차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¹²⁾

영국국방보고서에서 “앞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핵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물 부족과 기후 온난화 등 환경 재난이야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고 한 것은 환경안보의 절박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¹³⁾

이 보고서는 수자원 부족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유발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갈등과 종교, 윤리, 문화적인 충돌을 야기해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환경 재난으로 인한 갈등에 비해 최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문제가 표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미사일에 의한 전쟁 위협은 오히려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인간안보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두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환경오염 자체가 안보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위협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식량안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환경안보나 식량안보는 국가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협력적인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갈등이나 적대국가를 상정하는 군사안보하고 문제의 대응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11) 베리 부잔, 앞의 책, 65쪽

12) 한도현,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의 증대에 따른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대책’, 발행년도 미상, 385쪽

13) 영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국방을 위한 미래전략 배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중 일부다. 이 보고서는 환경, 자원, 인구를 포함하는 물리적인 범주를 비롯해 ▲기술 ▲경제 ▲사회·문화 ▲법과 윤리도덕 ▲정치 ▲군사 등 모두 7개 범주에서 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국의 미래 국방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기후 변화와 수자원 부족 등의 환경 재난은 단순한 재난을 넘어 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일부 ‘불량국가’ 들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강조하며 NMD체제 구축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 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문화일보 2001.2.9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고 있다. 빈곤 뿐만 아니라 공해, 인구, 질병, 마약문제가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 또한 범세계적 이념인 인간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UNDP는 1993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안보를 제기한다.

“인간안보는 국가가 아닌 인간의 안보를 강조한다. 안보개념은 국가안보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강조로, 군사력을 통한 안보에서 인간의 개발을 통한 안보로, 식량과 고용과 환경에 대한 안보로 변화해야 한다.”¹⁴⁾

UNDP에서 제시한 인간안보는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에 우선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의 극복은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1994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 인간안보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

인간에 대한 안보는 빈국에서나 부국에서나 적용된다. 인간에 대한 안보 위협은 빈국의 경우 기아와 질병, 부국의 경우 마약과 범죄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은 현재 존재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특히 실업이나 환경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인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건 인간에 대한 안보가 위협받을 때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아, 민족간 갈등, 사회 붕괴, 테러, 환경오염, 마약 거래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 중략... 사람들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안보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것은 기아와 질병, 범죄와 억압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차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 주변 환경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혼란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다.¹⁵⁾

2) 인간안보의 의미

인간안보 개념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적 차원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관점으로만 정의되어 온 안보개념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불안의 원인은 일상에 대한 걱정,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 건강, 환경, 범죄와 같은 문제들로서, 이는 인류의 안전에 관련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와 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첫째는 안보개념의 확대이다. 안보연구는 전통적인 전쟁현상의 연구로부터 환경, 질병, 여성에 대한 성폭력, 어린이 학대, 경제악화 및 환경파괴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평화와 질서, 경제활동의 확산, 오염 방지, 지구 온난화 억제, 질병 제어, 탈군사화와 비핵화, 생태계 보전 그리고 부패 방지 등 가능한 모든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안보의 주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안보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고 있다.

14) 199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http://www.undp.org/hdro/e93over.htm>)

15)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http://www.undp.org/hdro/e94over.htm>)

안보는 개인이 향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은 위협의 정의나 누구의 안보인가의 물음에 일차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안보조건은 민족, 인종, 문화 및 성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백인사회에서 흑인은 사회적 평등을 그 생존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의한 성폭력을 일상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통적으로 시민의 안보는 국가안보에 의해 보장되거나 일치되는 것으로 인식해온 것과는 크게 다르다. 국가안보는 국가제도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기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국제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은 곧 세계가 같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촌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불법적 행위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구촌의 안보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적합한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국제적 협력의 강화이다. 세계적 위협이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문제는 국가중심에서 보다 세계적, 종합적 차원의 안보문제로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우리가 추구하는 국제 정부(National Governance)는 민족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어진 국가간의 경계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돌연히 벌어진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르완다의 민족 분류가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¹⁶⁾라는 주장과 같이 국가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개별국가를 위협하는 요소가 세계전체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국제적 협력과 국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권 향상, 환경보호, 핵확산 금지, 대인지뢰금지, 부채탕감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 공통의 관심사로 다뤄졌고 해결되어왔다.

다섯째, 빈곤의 극복이다. 1995년 12월18일 유엔에서 열린 ‘빈곤퇴치의 해’ 선포식에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현재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빈곤으로, 사회안녕과 합법적 정치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각국 정부에 대해 ‘빈곤타파를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 인구 57억중 15억이 세계은행이 규정한 절대 빈곤에 속한다.¹⁷⁾ 그러나 절대빈곤 인구 외에 또다른 30억명도 극빈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가 되어버렸다.

모리스 밀러는 “빈곤은 불만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세가지 유형으로 변화한다. 첫째는 사회분열 유도이고, 둘째는 국가와 사회간 유대관계의 손상이며, 셋째는 제도의 무력화이다. 특히 국가 내에서의 불만 수위의 고조는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도발하는 정치적인 기회가 된다. 환경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의 빈발이 예상됨은 당연하다.”¹⁸⁾고 지적하면서 빈곤이 사회갈등의 요소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16) 오스카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1994년 Economists allied for arms reduction에서 발표한 글. <http://www.peacekorea.org>

17) 절대빈곤은 1년 개인소득이 3백70달러 미만, 즉 하루 의식주를 1달러가 채 안되는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활수준을 뜻한다. 90년 세계은행이 정한 최소한의 삶 기준이다.

18) Morris Miller, Poverty: A Cause of War? <http://www.peacemagazine.org/>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빈곤 상태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빈곤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인간발전을 위한 평화와 민주화의 추구는 임시방편의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환경오염처럼 빈곤문제 역시 해당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사회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쳐 그들의 경제, 사회발전과 폐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빈곤의 극복은 인간안보의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여섯째, 탈군사화이다. 탈군사화는 군사력의 역할을 축소하고 폭력문화에서 민주와 동의를 문화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한 군사비를 삭감하여 평화배당금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안보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중요하다. 특히 무기수출과 군사원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거래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재원을 유출시키고 분쟁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 무기의 수입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억압과 분쟁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케냐는 미국 무기 수입의존이 100%인데 이들 나라들은 예외없이 미국무기를 활용한 종족분쟁과 학살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이티, 터키, 과테말라, 아프카니스탄, 차드,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나라들도 내전과 지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미국무기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미국으로부터 공급된 무기들이 이러한 갈등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¹⁹⁾

일곱째,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등장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대해서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접근하는 경제적 관점은 환경의 보호와 빈곤의 완화가 그 출발점이며 동시에 주된 목표가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⁰⁾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인간안보 개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4. 결론 : 한국에서 전통적 국가안보의 한계와 탈군사화를 통한 재원마련

워싱턴 타임즈의 동북아 전문기자였던 돈 오버도퍼가 그의 저서 "두개의 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전계획 5027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반격을 가해 평양을 접수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중국 국경 인근까지 밀어붙여 결국 한반도를 재통일한다는 것"이라 한다.²¹⁾

실제로 94년 상반기에 미국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검토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94년 6월 15일 북한의 영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인 정밀폭격론이 대두한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미군증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돈 오버도퍼는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될 경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

19) 한겨레신문 1995.5.26

20) 김진현,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6쪽

21) 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서울)

닌 첨단 무기들 때문에 8만-10만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1백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 미국은 전비로 1천억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이며, 재산파괴와 경제활동 중단으로 관련 당사국들은 말할 것 없고, 주변국가들까지 지불해야 할 돈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증언한다. 즉 이러한 부담은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주변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다. 함택영 교수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민군의 스커드 및 프로그 미사일은 물론 장사정 '방사포'(다연장로켓)와 '주체포'(170mm)자주포에 의해 서울의 1,200만 인구는 물론, 복잡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취약한 건축시설물과 교통, 통신, 전기, 가스망은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한미양국은 수도서울의 방위라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²²⁾ 함택영 교수는 한미 양국군의 방어능력에 대해서 "화생방 무기나 장거리 포병에 의한 북한의 보복능력에 대하여 한미측은 대포병 레이다 및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일이 개발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한국의 지형 및 짧은 중심 등으로인해 기술적으로 여의치 못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방어의 취약성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입을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남북의 공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입증한다. 군사력 중심의 안보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서 탈피하는 것은 인간안보를 실현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안보가 가지는 한계 가운데 하나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른 개념과 혼동된다는 점과 포괄적인 사안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모아진다.

재원마련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탈군사화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10조 6천 억원에 달하는 4개 주요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기중선종을 마무리 한다. 4개주요전력증강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4조 3천억원, 차세대 공격용 헬기 2조 1000억원, 차기 대공미사일 2조 4천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조 8000천억원이다. 한국의 4대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 무기구입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하여 불필요한 무기의 구입으로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 중심에서 인간안보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탈군사화뿐만 아니라 평화공존과 관용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평화공존이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전쟁을 배재하며, 각국의 주권, 불개입, 신뢰에 기초해서 쌍방에게 유익한 지속적인 국제관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²³⁾ 남북이 평화공존하는 것이 통일과정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탈군사화의 배경이 될 수 있다.

22)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서울), 198-199쪽

23) 마르크스주의에서는 1920년대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전되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평화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의 구호는 다른 정부가 어떤 것이든 이들과의 평화공존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평화공존 개념이 도입된다.

관용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용납하고, 개체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상호교환적인 의미에서 관용을 생각해야 공존이 가능하다. 관용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한다는 독단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실천과 경험의 문제이다. 관용의 문화가 성숙하는 것이 인간안보를 실현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군축과 평화공존, 관용의 문화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여전히 인간안보라는 개념의 모호함으로 결론지워진다. 하지만 인간안보의 등장과 인간안보를 개념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인간안보를 이룰 수 있는 재원확보와 사회문화의 성숙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주는 개념의 중복과 모호함은 국가안보중심의 사회체제에서 대안적인 사회체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비용일 것이다. -끝-

통일주권의 문화적 해석과 한반도

韓相震 (서울대학교수: 사회학)

통일주권과 문화적 정체성

인권의 뿌리는 자기결정권에 있다고 할 때, “통일주권”은 고전적 의미의 민족자결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자결권의 이념은 매력적이나 구체적 구현 방법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족이라는 집합체의 의지를 누가 어떻게 대표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더욱이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집합적 권리로서의 민족자결권과 인권의 보루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주권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자결권으로 통일을 설명하는 역사적 선례가 희귀한 점도 난제이다. 식민종주국으로부터 신생 국가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집합적 자기결정권이 작용했고 존중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것과 같다. 구 소련 같은 제국이 분해되는 상황에서 민족자결권은 분리주의 운동을 낳았다. 얼마 안되는 통일의 경우에도 이것을 민족자결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호성이 크다. 전쟁이나 흡수 통합의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민족자결의 이념은 절차적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주권의 담지자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통일주권이 뜻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분할된 민족의 구성원은 현존하는 분단체제 대신 구성원 모두를 동등한 자격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부터 통일주권이 연유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민족의 구성원이 오랜 전통과 역사 안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보전해왔고 이것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단 대신 통일을 지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방식의 풍요로운 발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집합적인 지혜와 노력을 요구한다. 이런 배경에서 민족의 구성원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경제적 조건, 법과 행정의 제도적 틀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결정의 주체는 권력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이에 근거한 시민 개개인의 통일 의지의 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통일을 둘러싼 담론이 민족자결보다는 이해를 달리 하는 엘리트 집단 간의 당파적 여론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통일주권의 문화적 차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좌파적 통일 전선이나 우파적 부국강병의 입장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 현대적 인권 담론의 기초 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집합체 수준의 삶의 방식의 자기결정권이다. 이런 자기결정권의 인간 존엄성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이를 반영하는 공론,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통일주권을 이끌어 가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통일주권에 관하여 혹자는 失地회복(영토주권)을 생각하고 혹자는 부국강병의 국가 건설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경제적 이득 또는 이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통일의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이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모든 입법과 자기결정의 궁극적 주체는 시민 개개인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주권의 뿌리에는 우리가 같은 문화공동체에 속한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다. 남과 북을 아우르는 강한 문화적 자산이 바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이다. 자기결정권의 핵심은 한국인다운 삶의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문화적 선택권에 있다. 근대국가의 완성이나 부국강병과 같은 동기로 민족자결권을 보기보다는 한국인다운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으로 열려진 공동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외연에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아울러 통일이라는 ‘근대적’ 주제를 바라보는 ‘포스트 모던’한 시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 담론의 두 차원

현대의 인권 담론에 문화간의 다양한 대화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를 따라 흥미 있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토론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신뢰할만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공동체의 삶을 보다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인권 사상과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2) 자기결정과 선택의 주체는 시민 개개인에 있으며 그 위에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명제, 즉 공동체의 복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한다면, 또는 “나의 일은 나의 뜻대로 한다”는 식의 ‘개인 주권’만을 옹호한다면, 개인 생활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동체는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의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개인중심의 시장논리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권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복리를 구성원의 자기결정에 의해 추구하는 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권이 개인의 생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복리에 관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선호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 환경 및 토론의 기회를 풍부히 제공하는 것이 인권 구현에 필수적이다. 누구도 “이것을 선택하라”고 강제할 특권은 없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복리에 관하여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나 소통 및 조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인권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각과 문제를 부각시키면서도 집합적인 자기결정의 주체는 시민 개개인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체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한국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토대 위에서 통일주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궁극적인 결정은 시민 개개인이 내릴 문제지만, 시민들이 민족공동체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화적 전통과 삶의 방식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자유로운 토론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제공하는 집합적 활동, 즉 민족공동체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지도 모르나 사실은 남과 북 사이에 삶의 방식의 이질성이 현저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전통에 기대어 문화적 정체성 또는 동질성을 너무 안일하게 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전형적인 멘탈리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익숙해진 한 쪽 삶의 방식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공동체의 관점에서 문제

를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민족이 공유하는 언어, 관습, 전통, 역사의 맥을 새롭게 이어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민족자결의 과제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민족자결권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검토하려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성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의 광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 정보를 포함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 시민의 집합적인 자기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및 경험의 교환, 한민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조명, 자유로운 토론 기회 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노력이 없다는 개인의 선택은 자유방임적 시장 논리에 의존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주권에서 개인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이며 통일주권은 그 공동체의 질서와 복리에 관하여 이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건을 충실히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성격의 집합적 결정을 시민이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로운 의지형성에 기초하여 분단체제를 거부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통일주권은 내재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통일주권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력 주체를 상정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주권의 핵심 문제는 정치경제의 체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다운 삶의 모습에 관하여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만일 서로의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고 인식된다면 통일주권은 심각한 장애물에 부딪친다. 그러나 반대로 공감대가 커지면 상당한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요구가 성장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에 근거한 상호이해와 유대가 통일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독일의 통일 경험

이상에서 탐색한 통일주권은 분단된 민족의 쌍방에서 자유로운 통일의지의 형성을 겨냥한 것으로써 전쟁이나 흡수 통일의 방식 하에서는 오직 제한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례를 우리는 독일에서 발견한다. 서독 집권세력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의하여 동독을 흡수 통일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행정 결

정을 통하여 화폐 통합, 경제 통합, 군사 통합, 정치 통합의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통일의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양독 시민들이 왜 또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성취하며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기회나 광장을 향유하지는 못했다. 특히 서독의 집권 세력은 “통일을 빈틈 없이 준비된 행정 명령을 통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이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때문에 “동서독의 시민들이 정치적 자의식을 갖고서 공통의 시민적 통일체를 결성하기로 결정하는 규범적 의지를 갖춘 행동”이 통일주권으로 표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동독의 시민 역시 통일주권을 제대로 향유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갑자기 통제가 불가능해진 대규모 이민으로 인하여 경제적 토대가 파괴된 동독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군중의 시민운동이 일어났지만,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과 토론의 광장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불행했던 비밀경찰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여 집합적인 자기 인식에 대한 공적인 토론은 오히려 억제되었다. 그 대신 모든 일정이 서독 기본법에 의한 흡수 통일의 방식으로 급류를 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통일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보다 오히려 견고하게 만드는 후유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계산했던 서독 주민들은 과도한 통일비용에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동등한 시민권을 기대했던 동독 주민들은 서독인의 정복자 같은 행동에서 이등 시민의 박탈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통일주권의 문화적 해석에서 볼 때 이것은 심각한 결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교류 협력과 통일 주권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흡수통일의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는 통일주권의 표현도 유사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한은 한 쪽에 의한 타방의 일방적 흡수 대신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 즉 공존 공영을 통한 단계별 통일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매력적인 부분이 적지 않지만 역사적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통일 주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맥락에서 문화적 해석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일은 질풍처럼 다가온다.’는 명제가 암시하듯이, 기회가 왔을 때 전격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부담과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합리적

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간다고 가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을 통일주권과 연관시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경제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에 있다. 북한은 선별적 개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을 모델로 삼아 경제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에 성공한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로부터 위안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 따라서는 남한의 박정희 모델 또는 새마을 발전모델을 북한이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국제적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참여와 함께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도 많은 관심을 끄는 문제다.

여기서 통일주권은 공리적 타산의 합리성을 얻게 된다. 쉽게 말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까 통일은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한 보기가 북한에 많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다. 교육 수준은 높고 임금은 싸기 때문에 투자의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으로부터 통신, 정보, 물류 산업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방대한 것처럼 보인다. 만주, 시베리아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협력은 북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인권에 미친 함의도 적지 않다.

북한 경제가 도약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유능한 인적 자본의 형성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경제의 관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존 공영의 통일을 모색한다면, 북한 체제를 관리 운영하고 국제 사회에 적응시키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인적 자본에는 가치와 윤리가 스며든다. 북한 경제가 재건되고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중간층이 늘어나고 물질적 가치관이 확산된다면, 그 결과가 의미심장할 것이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북한 체제에 순응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차라리 남한과 같은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체제 內波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체제 안정의 문제에 직면한다. 경제 건설이 정치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민심의 이반을 자극할 것인가? 안정화란 쉽게 말해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믿고 그들의 리더십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태를 뜻한다. 동독이 무너진 이유는 동독 주민이 문제 해결을 서독 정부에게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체제 안정은 근본적으로 국내 문제로서 주민들의 변화 욕구와 체제의 성취 능력의 조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남북한이 공존 공영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간다면 서로가 상대방의 체제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컨대,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로 남한 내부의 봉기를 선동한다거나, 반대로 남한이 북한의 흡수 통일을 공공연히 주창하고 나선다면,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화의 추세에 적응하면서 체제개혁을 숨겨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북한에 이런 리더십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 관료제는 자전거 바퀴의 살처럼 수평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초기의 경제 성장을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이른바 '내포적' 발전단계로 진입하면, 그 구조로는 체제의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전망되기도 한다.

체제 안정과 연관된 미묘하고 복잡한 인권 관련 주제는 국경의 관리와 주민 이동의 문제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담과 긴장이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장치가 어떤 것이 되건 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통일주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부딪치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현상 고착화의 위험이다. 온갖 어려움과 역풍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고 남북한 쌍방에 안정된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가정해 본다면, 통일은 왜 필요한가의 질문에 다시 부딪친다. 어느 쪽이건 집권층이 불안한 통일 대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현상 고착화의 위험이 따른다. 또한 사회집단 가운데는 통일을 더 이상 당위로 보지 않고 계산에 따른 선택으로 보려는 경향이 늘고 통일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내적으로 견제하는 요소가 바로 민족 정체성과 문화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보다 양호하다. 분단을 인위적인 것으로 느끼고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의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나치즘의 악몽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기피했던 서독에서

조차, 1980년대까지의 사회조사 결과들을 보면, 통일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 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절대 다수는 통일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나이가 든 집단일수록 이 경향은 현저했다. 아울러 서독 보다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주권의 정서적 기반은 훨씬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은 서베를린으로 대거 몰려나왔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고 심각한 후유증이 뒤를 이었다. 이런 경험에서 볼 때 점진적 통일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소비의 환상으로 국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태를 막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른 현상고착화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관건은 결국 민족의 공유된 정체성과 문화전통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사회문화 프로그램에서 발견된다. 대중매체의 역할에 주목하여 민속, 역사, 전통, 예술, 문학, 종교, 음악,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남북한 체제가 공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적은 대신 마음의 공동체를 넓히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가 용이하다. 이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 힘으로 현상고착화를 막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주권의 문화적 해석은 폐쇄적 민족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민족지상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감정은 우리에게 득보다 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민족주의가 충돌하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큰 피해를 보기 쉽다는 역사적 경험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족 자결의 뜻을 영토주권이나 국가주권에 연결시켜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문화적 삶의 양식에 관한 선택권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발전시켜가려면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주권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기 존중의 조건이기도 하다. 통일주권의 문화적 해석은 부국강병의 이미지로부터 올 수 있는 부담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평화에도 어울린다.

통일 주권과 21세기 한국인 像의 문제

이상에서 우리는 통일주권의 근거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찾기 보다 민족의 정체성과 공유된 삶의 방식에서 찾고자 했다. 통일을 당연하게 여

기는 규범적 지향은 이런 문화적 상징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통일주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민족 사이에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마음의 공동체가 굳건해질수록 통일과정의 부작용이나 역풍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역량이 커지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통일을 지원하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마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 또는 반대로 마음의 장벽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경험적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다. 믿을만한 표본 조사가 양쪽에서 이루어진다면 결과가 흥미롭겠지만 아직 그런 조사는 시행된 적이 없다. 제한된 자료와 직관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벽은 별 것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심각하다고 한다. 만일 마음의 장벽이 매우 심각하다면 그런 조건의 통일은 되지도 않겠지만 시도된다 하도 좋은 결실을 맺기는 힘들다. 애당초 통일을 원할 정서적 토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과제의 하나는 남북한 사이의 상호이해를 가로막는 편견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립이나 정치체제 같은 외형적인 이질성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내부의, 즉 보이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문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북한 주민 사이의 표준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보다 훨씬 더 전통적이고 농촌적이다. 좋은 의미의 '촌놈' 같은 멘탈리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체면과 의리를 중시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자존심에 민감하다. 계산에 빠를 깎쟁이를 싫어한다.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단결심은 강하지만 개인의 창의는 꽃피기 힘들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 이에 비해 남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놀라울 만큼 도시화되었고 경쟁적이며 타산적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서양의 문화와 가치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개방적이지 대외의존도가 높다. 물질만능의 풍조가 확산되면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넓게 퍼졌다. 이런 두 개의 패러다임 사이에는 간격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본주의 가치지향을 갖는 북한 사람에게 남한의 어떤 삶의 방식은 더 이상 한국인의 정체성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의 단절은 상호 이해의 구조적 어려움을 낳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는 남한 사람에게 북한의 어떤 삶의 모습은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과거의 유산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상호 불신과 오해가 커진다면, 즉 마음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이런 조건에서 구태여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서로 따로 따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이것을 정치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통일주권의 문화적 기초는 난관에 직면한다.

통일주권의 문화적 해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오늘의 이 질성을 현실로 받아드리면서도 남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인상을 정립하는 데 쌍방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자택일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고 양자를 아우르는 발전 가능성을 찾는 신축성과 포용성을 요구한다. 남북한이 합의 볼 수 있는 것만을 모아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다. 서로가 공유하는 21세기 한국인상을 향하여 서로 변해갈 수도 있고 상대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이런 문화적 해석에 주목하여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통일주권을 향유하는 길이다. 독일은 이런 작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지 못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협력적으로 변해 가는 것, 바로 그 안에 분단된 민족이 권리로 주장해야 할 귀중한 문화적 삶의 선택권이 있다 (끝).

일상생활에서 본 북한의 성평등 실태와 여성인권의 문제

통일교육원 김석향

I. 문제의 제기

최근 2-3년 사이 남북한 교류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¹⁾ 예전과 달리 분야별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이 점차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남북한 여성계의 교류도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남북한 여성계의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향후 남과 북은 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여성이 성평등의 이념과 여성인권의 개념을 기준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생활세계가 지닌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남(南)과 북(北), 남(男)과 여(女)가 함께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성평등의 이념과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 여성의 현실을 대비하는 것도 북한여성의 생활세계를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며 남과 북, 어느 한 쪽 여성의 일상적 생활세계가 다른 쪽의 경우보다 더 낮고 못함을 비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 1990년 이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도표를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방북인원이 급증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http://www.unikorea.go.kr> 참조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 온 선각자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만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북한당국이 정권을 수립하기도 전이었던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및 그 시행세칙을 공포·시행한 이후 여성의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남북한의 교류가 늘어나고 북한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부족하나마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북한을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하는 의견은 많이 줄어들었다. 북한당국이 마련한 제도의 혜택이 실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면서 북한당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여성의 지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20%가 넘는 북한의 여성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비율과 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예외 없이 등장하며 개인적으로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사실상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남한 여성의 실정과 곳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립해 놓고 근무 중에도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수유시간을 배정하는 북한 여성의 상황을 대조하는 사례는 빠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의 이념과 여성인권의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글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남북한 여성의 지위를 대비시켜 볼 것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위해 남북한 당국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일상적 측면에서 본 북한여성의 지위를 고찰해 볼 예정이다. 북한당국이 여성을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이념이 구현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보편적인 인권 및 여성인권의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하여 남북한 여성교류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제도적 측면에서 본 남북한 여성의 지위 비교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정권을 수립하기 전부터 여성의 지위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45년 11월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전신인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설하는가 하면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의 첫 조치로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고 곧 이어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세 가지 법령은 북한당국이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체제의 골격을 이루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데²⁾ 공교롭게도 모두 성평등의 측면에서 본 여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북한여성이 남성과 같이 토지를 분배받아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 법령의 시행세칙 제15조는 “가족 수와 가족 내 노동력의 수”를 기초로 각 가구별 토지분배점수를 계산한 뒤 이 점수와 1점 당 분배토지 면적을 곱하여 각 가구가 실제로 받게 되는 토지의 면적으로 산출하였다. 이 때 토지분배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남자 18-60세, 여자 18-50세는 1점을 주고 남자 61세 이상, 여자 51세 이상의 경우 0.3점을 주었다.³⁾ 비록 10세의 연령 차이는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여자의 노동력을 남자와 똑같이 인정하고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했다는 것은 분명히 파격적이었다.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산전 35일·산후 42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했고 1년 이내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노동자에게 1일 2회 30분의 수유시간 허용, 임신 6개월 이후 산전휴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노동 금지, 시간외 노동과 야간노동 금지 등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또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제1조에서 “국가 경제·문화·사회·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뒤 시행세칙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각급 공직을 맡을 권리를 가지며 (제1조),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제5조), 이혼을 할 때 결혼 중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과 자기 몫의 토지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권리 (제21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2.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11쪽

3.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87쪽;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연령을 기준으로 9세 이하는 0.1점, 10-14세는 0.4점, 15-17세는 0.7점을 배정하였다.

1946년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법령의 내용은 최근까지 남한의 여성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확립했다고 하지만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여성인권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관심이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게다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적인 조치는 1946년 발표한 세 가지 법령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남한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1. 정치적 권리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남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비율은 1948년 제1기 대의원을 구성 하던 당시부터 이미 여성의원의 비율이 12.1%에서 출발했다. 그 이후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가하여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중의 여성의원 비율은 20.1%에 이른다. 한편 남한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16대에 이르러 총 273명중의 17명을 차지하여 6.2%에 이른 것이 최고의 기록이었다.⁴⁾ 제15대 국회 당시 여성의원의 비율은 3.6%를 기록했으며 제헌국회 이후 제 15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원은 연인원 80명으로 총 의원 수 3,77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1% 수준이다.⁵⁾

2. 경제적 권리

여성의 경제적 권리는 그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가 하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 및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있는가 하는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여성의 노동권

4. 2000년에 출범한 제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은 16명으로 출발했으나 그 이후 한 명이 의원직을 승계하여 17명이 되었다.

5. <http://columnist.org/ysi/d/fem.htm>

을 보장하기 위해 1946년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산전·산후 유급휴가제, 수유시간 허용, 임신부와 산모의 중노동 및 시간외 노동, 야간노동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은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1993년에는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의 제정을 통해 산전 60일·산후 90일 등 총 150일을 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또한 임신부와 허약한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1948년과 1949년 [여성상당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가 하면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조치로서 1947년과 1949년 [탁아소 규칙]과 [탁아소에 관한 규정]을 필두로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편 남한은 1987년에 이르러 여성의 인력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에 명시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1995년에 제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이 법률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법률과 규정의 제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회의 여성의 위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법률과 규정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면 북한이 앞서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여 삶의 기회를 찾게 하는 통로로서 한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려 왔는가 하는 점은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북한당국은 1975년 이후 유치원 높은반 1년-인민학교 4년-고등중학교 6년으로 이어지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해당 연령층의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에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녀성의 인텔리화 정책"을 통해 남녀 사이의 문화지식 수준의 차이를 없애 여성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⁶⁾

남한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제도를 198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2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남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 여부가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던 197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 진학을 앞둔 남한의 여성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4. 폭력과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와 같이 제도적 측면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여성정책은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성인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꼽히는 폭력과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은 일부다처제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공창·사창·기생제도를 금지하고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행 금지조항을 명시했다. 문제는 그 뒤 북한당국이 공포해 온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여성폭력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1953년 형법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과 인신매매, 추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폭력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한 결과였다. 여성폭력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1993년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법]을 필두로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⁷⁾

남북한 여성의 지위를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정치·경제·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특히 여성의원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한다거나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탁아소와 유치원 시설 확대를 강조해 온 북한의 현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여성인권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여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

6. <http://women.or.kr/unification/policy/wlaw01.html>

7. <http://root.re.kr/root/root-report-1.htm>

III. 일상적 측면에서 본 북한여성의 지위

일상적 측면에서 본 북한여성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북한주민의 생각을 폭넓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단상황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북한여성의 숫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렵게 북한여성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리 높여 북한에는 여성문제가 없고 문제여성만 있으며⁸⁾ 자신들은 “수령님이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상문화적 락후성과 가정일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남조선 여성과 비교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달리 그 실상을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차선책으로 북한의 소설 및 신문 등 출판자료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활용하여 일상적 측면에서 본 북한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1. 여아의 출생과 남아선호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환영을 받는지 여부는 보편적 인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런 만큼 한 사람의 여성이 태어나는 순간,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점은 여성인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역에 속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딸이 태어났을 때 환영하는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편이라고 한다. 40대 여성은 1990년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딸이 있는 부모는 쫓겨나지 않아도 딸이 없는 부모는 쫓겨난다는 말이 있는데도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단연코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 북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증언의 내용은 1993년에 나온 북한의 소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순은 집안의 맏이었다. 그의 동생이 아직 태어나기 전 도인민병원의 권위있는 박사 선생은 아들을 하나 기어코 낳아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임신부를 손수 진찰해보고 나서 자식낳이는 이번으로 그치는게 좋겠다고 권고하였다...앞으로 또다시 낳게 된다면 그 역시 딸일 것이라는 암시였다. 격분하고 락심한 임신부는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박사

8. 박혜란, ‘남북한 생활문화와 삶의 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의 비교 (이배용 편), 이화여자대학교 (1997), 259쪽

선생을 아무 것도 모르는 개대거리같은 두상이라고 욕을 하다가 그만에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절끔 닦았다. 그렇지 않아도 드살이 센 함경도 녀자가 얼마나 야단을 해대는지...녀인은 여섯이나 되는 자식을 슬하에 두면서도 아들 하나 없다고 서운해하였는데 나이 들어 가면서는 남편 앞에서 그것을 늘 미안해하였다.⁹⁾

1993년에 나온 『바다는 내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순은 딸 여섯을 둔 딸부잣집의 맏딸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이순은 한 마디로 나무랄 구석이 없는 처녀로 그려진다. 일 잘하고 똑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하며 부모가 인정하고 동네에서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인물만 팔아도 호강을 하게 될” 정도로 곱게 생겼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모두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않는다. 1991년에 나온 『단발머리』라는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온 집안은 경사로 들끓었다. 그렇게도 바라던 딸이 태어난 것을 아신 아버지가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로 뛰여 올라오구 장난꾸러기 세 오빠들은 어머니 주위에 오구구 모여 앉아 갓난아기의 빨간 주먹을 쥐여보려구 움지락거렸다누나. 하루종일 방안이 좁다 하게 뛰여다니는 사내애들만 있는 집안에 참하고 귀여운 딸애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 연공인 아버지는 반생을 로동으로 거쿨어진 손에 만오빠 연필을 부여잡고 학습장 한 권을 다 써버리며 송미라는 내 이름을 지었다. 언제나 푸르싱싱하게 아름답게 자라라고...¹⁰⁾

『단발머리』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혜정의 친구로 등장하는 송미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 자랐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였다. 위로 아들만 셋을 둔 집안에서 막내로 딸이 태어났을 때 온 집안 식구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다.

서로 다른 소설의 두 장면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읽어보게 한 뒤 어느 쪽이 일반적인 상황이나고 질문했더니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간혹 딸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였다. 실제로 북한주민이 어느 정도로 남아의 출산을 선호하는지 측정할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선호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9. 로정법, 바다는 내 사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19쪽

10. 김은옥, 단발머리, 평양: 문예출판사 (1991), 91쪽

2.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일상화된 남성우대 문화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하거나 이들이 기록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살아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에는 “남녀평등권·남녀평등제도·남녀평등정책”이 있어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우리도 중국처럼 남녀평등권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실시한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 조선 여성들이 남편 공대를 잘하는데도 남자는 그렇게 잘 하지를 않고 좀 권세를 피운다. 남자들은 나이 많은 분들에게... 쌍말을 하고 때리고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 예절 없는 현상이 드문 있다. 부모들도 예절이 없다고 욕은 하지만... 나도 전에는 남자들이 쌍말하는 걸 “남아다운 패기다” “남자라면 저쯤 만한 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와서 남조선 사람을 얼핏 보니 생각이 달라진다.¹¹⁾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 조○○은 북한에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서 여자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지만 가정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¹²⁾ 자신은 어린 시절 맏딸로서 채석공장 탁아소 원장이었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살림을 온통 도맡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지냈는데 아들인 오빠는 늘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오빠나 남동생에 비교해 볼 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북한여성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¹³⁾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사회에서는 남녀평등정책에 따라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학교생활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은 있지만 학교에서 여학생을 사로청위원장이나¹⁴⁾ 분단위원장과 같은 간부로 선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11.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44쪽

12. 2000년 12월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자료

13. 『조선말 대사전』에서 딸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업신여기던 딸이 떡함지 이고 온다”는 예문이 나온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대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198쪽

했다. 여학생이 선출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다는 것이었다.¹⁵⁾

또 학교 다닐 때 왼쪽을 간다면 여학생들이 쌀과 된장은 물론이고 밥솥이나 그릇, 빨나 무까지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남학생들은 그저 와서 먹는다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군사야영이나 농촌지원에 나갔을 때 남학생이 빨래감을 맡기면 여학생은 아무 말 없이 빨아서 가져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녀는 “여자로 태어나면 그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¹⁶⁾

그렇다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학교에서도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차별이라는 것보다 가정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고 대답했다.

한편 30대 여자로 1981년-1995년에는 무산광산 노동자로 일했고 1995년 이후 1997년까지 연사군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지내다가 북한을 떠난 홍○○이라는 여성의 면담기록을 보면 “가정에서 남녀간에 차별이 많아도 직장에서는 직업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남녀가 동일하게 노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그런데 그녀의 증언 중에는 “직맹원을 제외하면 남자들은 총화시간에나 보일 정도로 근무에 태만하며 근무시간 중 음주나 부녀자 폭행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현상은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은 20대 남자로 1994년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한 뒤 다시 일어과에 들어가

14. 1996년 이후 사로청은 청년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 부른다. 사로청은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약칭이었으나 1996년 1월 김정일의 지시로 사회주의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 뒤 그 약칭도 청년동맹으로 바뀐 것이다.

15. 2000년 7월 면담한 50대 탈북여성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사로청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당시 함경북도 경성시의 10여 개 고등학교 중에서 여자가 사로청위원장으로 선발된 경우는 자신의 딸 이외에 없었다는 점을 자랑했다.

16.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북한 전역의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는 돌격대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작업복을 빨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언급한 소설의 여자 주인공 이순은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는 진수의 빨래를 도맡아 해오다가 서로 사이가 서먹해지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그가 소금이 내뻘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전처럼 빨아주겠다고 나설 수 없다는데서 오는, 무엇인가 귀한 것을 놓쳐버린 듯한 허전함...” 로정법, 바다는 내 사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69쪽

17.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8월 “북한실상 및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귀순자 면담결과 보고”

서 공부하다가 중퇴했고 그 이후 자동차사업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북한을 떠났다. 그는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려도 여학생이 감히 항의하지 못할 정도로 남녀차별이 심한 편이라고 증언했다.¹⁸⁾

한편 30대 남자로 1993년 김책공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신의주경공업 대학 수학강좌 조교원을 지냈고 1996년 8월부터 사회안전부¹⁹⁾ 산하 외화별이사업소 지도원을 하다가 12월에 북한을 떠난 최○○은 북한이 “남성본위주의” 때문에 남녀간 직업적·사회적 차별이 심하며 농촌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진다고 평가했다.²⁰⁾

그러나 평양 출신의 엘리트 여성도 직장에서 남녀차별이 뚜렷하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은 대도시라고 해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김○○은 40대 여자로 김일성종합대 고전문학과 졸업 후 1979년-1995년 국방·군수와 관련한 기초이론을 제공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제2자연과학출판사 기자로 재직하면서 과학자와 군수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사를 집필하다가 1997년 8월에 북한을 떠났다. 전문직 여성이었던 김○○이 볼 때 그녀의 직장이었던 제2자연과학출판사는 남녀차별이 심한 곳이었다. 차별의 증거로 그녀는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 출판사의 200명 중 여기자는 명목상 50명이지만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 2명밖에 없었다.”²¹⁾ 말하자면 여자에게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남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여성들은 북한의 특징을 설명할 때 남녀평등권·남녀평등정책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인민군 하전사로 근무하다가 북한을 떠난 손○○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 집에 갈 수 있지만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는 못 간다고 증언하는 것을 들었을 때²²⁾ 제도와 현실 사이에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18.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8월 “북한실상 및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귀순자 면담결과 보고”

19. 지금은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0.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3월 “북한실상 및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귀순자 면담결과 보고”

21. 신동아, 1999년 6월호, 263쪽

22.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9월 “북한실상 및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대한 귀순자 면담결과 보고”

3. 부부관계의 성평등 실태: 가사분담 상황과 가정 내 폭력의 문제

부부관계의 평등함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북한의 부부관계가 과연 평등한지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만 접근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일반적인 부부관계는 여자의 순종적인 태도를 전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남자들이 여자들을 좀 어떻게 대할까?자기 아내라기보다도 자기 가정에 주부라기보다도 딱 ... 머슴을 대하듯이 그런 점이 있어요.... 이거하라, 저거하라, 남자들이 말하면 여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이 너무 완강하고 좀 그랬어요. 모든 걸 여자를 아주 낮춰 보고 아주 무시하고... 남편에게 쥐여 살았어요... 북한에서는 남편이 항상 두려운 존재였고.... 그리고 남편을 높이 보면서 살았고.... 남자는 여성이 복종해야 할 존재이고 남성의 권리가 강했어요. 정치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²³⁾

조ㅇㅇ은 북한에서 여자는 일단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다고 말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석삼년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시집을 간 뒤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남편인 “세대주의 식사를 옹호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15일에 한 번 식량배급을 받아 오면 남편의 뭇으로 하얀 입쌀을 따로 구분해 놓은 일에서부터 매일 저녁 남편의 퇴근 무렵이 되면 제때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 친정에도 마음놓고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여자들도 다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했겠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북한을 떠날 때까지 단 한끼도 허술히 넘길 수 없었던 남편의 식사보장”이 가장 힘든 시집살이었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다.

23. 김정미,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21-22쪽

이와 같은 희생적인 모습은 사실상 북한여성의 일반적인 생활태도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밥을 지으면서 아버지 뭇으로 하얀 입쌀밥을 준비하기 위해 솥 안에 가재를 펴놓고 그 위에 쌀을 얹어 밥을 지을 때부터 잡곡밥과 쌀밥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의 밥그릇에 잡곡이 섞이게 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 점점 적어지고 잡곡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의 밥그릇에 쌀알”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²⁴⁾ 특히 식량난이 심해지고 난 이후에는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은 굶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북한여성의 희생적인 생활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았다.

류레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을 넘으며 오늘에 이르는 나날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역량으로 우리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 혁명을 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묵묵히 바친 그 값비싼 사랑과 헌신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 수 있으랴... 때식을 끓일 길이 뉘뽀리를 캐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가정과 혁명 앞에 지닌 자신들의 사명을 다 하려는 각오와 헌신의 마음이었다.... 한 공기의 죽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양보하며 밝은 웃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켜 온 우리 녀인들, 귀여운 자식의 손에 좋은 것을 쥐여주지 못해도 남편과 아들들의 밥곽에 나물밥을 담으면서도 아무 내색도 없이 출근길에 올라 빈 밥곽을 감추어 가며 선반기를 돌려 가던 강직한 희천의 녀인들.²⁵⁾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사일을 분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식량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서 준비하고 가루탄을 받아서 연탄을 찍거나 장작을 패서 땀감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히 여자에게 차례지는 뭇”인데 그나마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전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생고생 열 두 가지 고생을 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남편인 세대주가 도와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증언의 내용이다.

대다수 북한여성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특별히 분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남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 할 일 따로 있는 것”이고 “여자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순종을 하게끔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²⁶⁾ 가정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고생스러

24.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26-27쪽

25.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제4면,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조선녀성들의 긍지,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운 일은 당연히 여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며 남편이 “거들어주면 고맙고 안 거들어주면 혼자서 꾸려나가야 할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여성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다.

북한여성은 세계 어느 나라 여성들보다도 근면하고 헌신적이다. 여성의 노동계급화라는 당의 노선에 따라 ‘혁명을 떠미는 한쪽 수레바퀴’라고 칭송 받는 북한의 여성들은 남자와 똑같이 협동농장과 공장에서 힘든 노동을 겪어낸다....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곤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뿐인가.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도맡아하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거의 여성의 몫이다.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정다운 아내와 누이들’이 없다면 북한의 가정, 나아가 북한사회는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집안 일을 돕지 않고 건달 피우는 남자들을 빗대어 ‘남자는 나비라네’로 바꿔 부르다가 최근에는 ‘여성은 황소라네’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현숙하고 근면하고 남자를 존경하여 떠받드는 북한여성은 북한남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 아닐 수 없다.²⁷⁾

문제는 이렇게 여성이 남편의 가사분담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 내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책을 못 가져가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집에다 알려준다. 남편은 일을 하니까 집에 다녀갈 시간이 없으니 내가 책을 갔다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을 때 저녁에 와서 신경질을 낸다. “학습노트를 왜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학습에 못 참가했다”는 식이다. 집에 있는 나는 나대로 제 할 일이 바빴기 때문에 남편 말에 반박이 나가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난다. 싸울 때는 무섭다. 막 때리고 치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을에서 많이 봤다. 대체로 여자가 맞는다. 그러나 여자도 꽤 씩씩한 생각이 드니까 센 여자들은 같이 때리고 뭉 던질 때도 같이 던진다.²⁸⁾

또 인간생활이기 때문에 “남편이 딴 여자를 본다.” 이럴 땐 여자가 꽤 씩씩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상정되어 남편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의 회의 때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사람들 앞에서 딴 여자 본 것을 비판받으면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했다고 아주머니를 때린다.²⁹⁾

26. 김정미, 앞의 글 (주23), 20쪽, 25쪽

27. 최주환, ‘여성이 북한을 먹여살린다,’ 북조선입구 I, 지식공작소 (2000), 87쪽

4. “신랑감을 찾는 사업”의 중요성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²⁹⁾ 1995년 이후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젊은 여자들 중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³⁰⁾

북한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의 나이가 25세를 넘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강박관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97년에 나온 북한영화 [청춘이여!] 초반부에서 남자주인공 기호의 아버지는 나이 30이 다 된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를 향해 “총각은 나이 들수록 금값인데 뭘 그리 걱정을 하는가” 하고 타박을 한다. 반면에 “호박은 늙을수록 맛이 있어도”³¹⁾ 처녀는 갓 스물을 넘기려 할 때 잠깐 금값이고 25세가 지나면 값이 툭 떨어진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한때 노동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만혼을 장려하면서 결혼 연령은 여자 28세·남자 30세가 적당하다고 강조했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접근도 처녀의 나이가 25세를 넘기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태도를 바꾸지 못했던 것 같다.

북한의 처녀에게 있어 “신랑감을 찾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결혼식 날보다 약혼식 날 부부동침을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의 수가 많다니 여성들이 시집가기가 힘들어서 여자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 남자를 쟁취하려고

28. 좋은벗들, 앞의 책 (주11), 43-44쪽

29.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혼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그녀는 한참 생각하더니 “북한사회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30. 좋은벗들, 앞의 책 (주11), 132쪽; 북한여성들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재미있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들 같은 경우 제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남자까지 거두자면 힘들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니 30살이 넘는 남자들이 많다.”

31. 리성식, ‘행복의 방아,’ 조선문학, 1998년 1월호, 61쪽

약혼식 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취기가 오르면 여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한다. 일단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자는 법적으로 여자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³²⁾

간혹 여성 본인은 싫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도 아버지가 나서서 잠자리에 들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모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자가 싫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따라다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남자를 “남자다운 성격”을 지닌 존재로 미화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그 사람은 나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내 의견을 듣지 않고 내 의향을 듣지 않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자기네 집에 가서도 승낙을 받았고... 내 자존심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때 우리 집에서도 마지막에는 두 손 네 발 다 들었어요. 나 끝까지 그 사람하고 안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 좋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싫다고 한 거예요....그런데 그 사람이 일요일에 왔는데 약혼식을 그 날로 했어요... 약혼식을 그 날로 했는데 그 남자가 약혼식 날에 그냥 나하고 같이 자자고... 안 자겠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 날 같이 자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죠.³³⁾

일단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법률상 남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런 경우 남자들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직장이나 당조직, 청년동맹 등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풍토가 있다는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난다.

연애를 하다 애가 생겨서 문제가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를 세우고 비판해 주고 무조건 살게 만들려고 한다. 사회주의는 서로가 살게끔 하자는 게 기본목적이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살게끔 교양을 주는데 강제로 살라고는 못한다. 비판무대에 올리고 욕하고 해도 안되면 여자한테 처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는 아이를 떼어버린다.³⁴⁾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여자의 정숙함을 강조하면서 연애를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³⁵⁾ 혼전 성관계가 그렇게 낮은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짐

32. 2000년 12월, 3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33. 김정미, 앞의 책 (주23), 24쪽

34. 좋은벗들, 앞의 책 (주11), 47쪽

35. 김정미, 앞의 책 (주23), 32쪽

작할 수 있다. 문제는 정확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다른 피임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임신을 했을 때 남자가 싫다고 하면 인용문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를 떼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 매춘과 성폭력·성희롱의 문제

굳이 성(性)에 대한 엄숙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부모와 교사가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해하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성향을 짐작해 보기로 하자.

달거리를 할 때 엄마한테 교육받는 것은 없고 중학교 실습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준다. 달거리가 시작되면 이제 여자로서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위생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만 알려 준다. 이 달거리가 다른 한 인간을 잉태하기 위한 시점이라는 건 안 알려준다. 그건 말하기가 무엇해 한다. 선생님들도 뻔히 아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 동무들이 달거리하기 때문에 남자들과 주의하십시오”라고는 하는데, 왜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선생님은 “그 책을 다 읽어보시오”라고만 한다. 우리는 그걸 다 읽어보고 자체로 안다. 부부간의 성 관계도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아내를 망신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⁶⁾

이와 같은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춘과 성폭력·성희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에도 매춘과 성폭력·성희롱의 문제가 존재하며 여성들이 이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짐작해 보기로 하자.

함흥, 청진, 혜산 같은 곳에 가면 역전에 몸 파는 여자들이 많다. 먹을 것을 주거나 조선 돈 50원에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원래는 사회주의라고 하여 많은 것을 통제하여 왔는데 지금은 통제를 하지 못한다. 옛날 같으면 그런 여자는 총살을 당했을 것이다. 간부들이야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많다. 밑에 일하는 여

36. 좋은벗들, 앞의 책 (주11), 50-51쪽

자들이 많으니까 “입당할래?” 하며 유혹한다. 기관의 간부들은 종업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하루 저녁을 데리고 노는데, 여자가 거부하면 입당시켜 준다고 유혹한다.³⁷⁾ 그 말에 순한 처녀들이 노리개가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³⁸⁾

북한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는 곳이면 늘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고 패싸움이 발생한다. 돌격대원들은 작업장 주변 공장 기업소와 사민가를 상대로 한 도둑질과 집단구타, 서로 간의 패싸움, 문란한 성생활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북한의 서북부 순환철길 공사에 투입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의 패싸움이었다.³⁹⁾

이와 같은 인용문이 북한사회의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당국이 공개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회 내부에서는 일상적으로 매춘과 성폭력·성희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7.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여자가 당원이 된다는 것은 남자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당원이 되려면 자신이 속한 단위의 당 세포비서의 추천이 절대적인 만큼 여성들이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으며 또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8. 좋은벗들, 앞의 책 (주11), 133쪽; 이 글에서는 북한여성들의 혼전 성관계 경험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새 것을 찾겠으면 탁아소에나 가보라”는 말을 소개해 놓았다.

39. 김승철, 앞의 책 (주24), 64-65쪽

IV. 남녀평등에 대한 북한여성의 “이중적인 인식의 구조”

앞에서 소개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 사는 여성도 그렇지만 이미 북한을 떠나 온 북한이탈주민들도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예외없이 “남녀평등제도”의 특징을 거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여성은 남자와 똑같이 그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정치·사회적으로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막상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다 보면 성차별 현상과 여성인권을 위협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분명히 일상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이 북한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남녀평등”을 언급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검증된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당국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한 여성의 처지”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여성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교육에 힘을 기울여 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북한의 신문과 방송 및 각종 출판물과 학습자료에 이르기까지 북한여성의 지위를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로 소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

1992년에 나온 『조선말 대사전』 제1권에서 “여성”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 그 용례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낡은 사회·자본주의 사회·봉건 사회”의 여자들은 “철 들기 전부터 일본인 공장의 여공으로 고된 노동력을 팔아야 하고, 카페나 카바레 또는 빠 같은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급으로 구박을 받는 존재이며 관가의 여자 종”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용모가 뛰어나고 재주가 비상하거나 자색의 아름다움이 한 고을의 으뜸인 전통사회의 여성도 등장하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남자와 똑같이 선 당당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북한여성의 모습은 “김일성 광장에서 항일유격대원의 복장을 입고 붉은기를 날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녀대학생들의 자랑스런 대오”와 “김일성 광장 앞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 가는 녀성군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들째, 북한의 로동신문과 방송은 “남조선의 여성들은 착취와 압박의 대상이며 미제침략군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해 왔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에서 돈없고 권세없는 근로인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그들은 항상 불행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여성들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남조선 여성들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죄 아닌 《죄》로 온갖 차별과 천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흑심한 정치적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남조선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다고 한다.⁴⁰⁾

사진을 보라. 길가던 남조선 여인이 두 팔을 머리로 쳐들고 미제 침략군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있다.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미제 침략군 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남조선 여성의 가는 길을 막고 아무 거리낌없이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가. 이야말로 인권유린의 극치이다.... 저 여인이 당하는 수모는 곧 남조선 여성들이 당하는 수모이며 저 여인의 참상은 곧 남녘겨레 모두의 참상이다.⁴¹⁾

북한주민들이 이와 같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보고 읽으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내용을 보거나 들으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남녀평등에 관한 북한여성이 이중적인 인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남녀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개인의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 남녀관계에 대해 충고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40. 로동신문, 1999년 3월 8일자, 제6면, ‘언제면 차별이 끝나겠는가’

41. 로동신문, 1999년 3월 8일자, 제6면, ‘더 이상 모욕당할 수 없다’

남한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남자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동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남자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도 여기에 있다....남한여성과 결혼하려면 북한식 남성권위주의를 없애고 동등한 입장에서 여자를 배려해야 한다.

북한에서 가져 온 남존여비사상을 버리고 여자는 남자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한국에 왔다고 해서 남편에게 대들고 가출하는 등 그릇된 생활양식을 버려야 한다.

많은 귀순자들이 남한여성과 사귀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다. 북한에서는 남녀간에 친구라는 개념이 없고 남녀간 만남이 남한처럼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터득하고 사랑과 친구 사이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⁴²⁾

42. 통일부 정보분석국 자료, 2001

이산가족 상봉에서 나타난 체제적 문제들
- 2001 인권재단 학술회의 발제 -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1. 이산 상황의 확인과 복권

(1) 이산가족의 범주와 성격

- 이산가족과 관련된 여러 범주는 현실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 내지 희생자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대다수는 월남자와 월북자 가족임.
- 미전향 장기수 북송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일환으로 실현되었음.
 - 미전향 장기수의 경우 북한 정부가 남파 등 공작 행위를 인정한 결과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북파 공작원의 송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전제로 남한 정부가 북파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총련계 재일동포도 일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음.
 - 총련계 재일동포는 남쪽에 고향을 두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非남한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며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적 상 무국적자 상태임.
- 남한 내에서는 '국군포로'와 '남북자'들을 송환해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2차 이산가족 사업에서 각각 하나의 경우가 비공식적으로 상봉이 실현된 바 있음.
- 국군포로 문제는 우선 생사 차원에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를 국제법적 차원의 포로 문제로 다룰 수는 없게 되어 있음.
 -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미 체결된 휴전협정을 다시 체결할 수는 없음.
 - 남한의 반공포로 석방 문제가 상호적으로 얽혀 있으며 미송환 국군포로의 상당 수는 인민군에 편입된 경우가 많음.
 - 미송환 국군포로의 대다수는 휴전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 정착, 새로이 가정을 이루고 있음.
- 남북자 문제는 북한 정부가 납치 행위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난점이 가로놓여 있음.
 - 6-25 전쟁 당시 강제 납북자, 납북 항공기 승객 등 외에 납북 어부 등은 월선 행위에 따른 강제 억류자가 많으며 납북자는 좀더 엄밀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남한 정부가 남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북한 정부는 '남남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

(2) 월북자와 월남자의 이산 상황 복권

-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남북 양 체제 속에 고착되었던 냉전적 구조 해소 작업에 직결됨.
 - 단순히 헤어진 가족이 끊어졌던 혈연을 잇고 맺혔던 한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한 각각의 국내 냉전 상황을 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 동안 분단으로 숨겨져 있던 이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어떠한 상황이든 이를 복권시키고 인정하는 노력이 요청됨.
- 헤어질 때의 이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정치적, 사회적,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이산가족이 다시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
 - 대체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나온 남북의 가족들은 분단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중에 헤어진 사람들임.
 - 이산가족은 이산 당초에는 그러한 의식이 희박하였으나 남북에 두 개의 국가가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다른 '국민', '인민'으로 '형성'된 것임.
- 제1, 2차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은 거의가 월남자, 월북자들이었음.
 - 남측 가족으로서 북측에 있는 가족을 찾는 경우는 거의가 이북을 고향으로 갖는 월남자들임.
 - 이에 비해 북측 가족으로서 남측에 있는 가족을 찾는 경우는 거의가 이남에 고향을 갖는 월북자들임.
 - 무언가의 이유로 남쪽으로 넘어 오거나 북쪽으로 넘어 간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다시 찾는 경우임.
- 대개 북측에서 남쪽으로 넘어 온 월남자들이 남한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반공 세력의 증추를 형성했듯이 남측에서 북쪽으로 넘어 간 월북자들도 북한 사회에서는 정치 이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충실했을 것으로 짐작됨.
 - 토착민들에 비하면 사회적 기반이 없는 채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터이지만 월남자나 월북자는 각각 남한 및 북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당당할 수 있었음.
 - 이들은 각각 자기 체제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체제를 선택한 사람들로 상당한 정치적 희생을 치렀음.
- 월남자나 월북자 가운데에는 정치적, 이념적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른 체제를 택한 경우, 전쟁의 혼란한 와중에 생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출신 지역을 떠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임.
 - 월북자 가운데 당시 학생인 경우 의용군에 입대했다가 후퇴 과정에 북으로 넘어 간 예가 많음.

- 의용군 입대는 이념적 이유로 자발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거의 강제에 가까운 입대도 있었을 것임.
- 그밖에 전시에는 생존책으로 군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개개인에 따라 갖가지 사연이 있을 것임.
- 남쪽에 남은 가족은 월북자들을 자발적이든 강제이든 거의 모두 이를 "의용군에 끌려갔다"고 그 강제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음.

2. 이산 상태와 국가 책임

- 이산가족들의 생존 및 존재 방식은 바로 그들이 소속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줌.
 - 월남자와 월북자가 자기 출신 체제와는 다른 체제에 '당당히' 살고 있는 동안 남아 있던 가족들은 거꾸로 그 사실을 뿔뿔이 밝히지 못한 채로 살아야 했음.
 - 남한 내에서는 70년대까지 월북자 가족들은 공직이나 그럴듯한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연좌제가 시행되었음.
- 제도적 연좌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심리적 차원에서 연좌제는 사라지지 않았음.
 -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실행될 때 북측 명단에 포함된 월북자들에 대해 그 가족들은 그 존재에 대해 뿔뿔이 밝히지 못하고 쉬쉬하며 지내 왔음이 드러났음.
 - 남한 사회 내의 심리적 억압 상태는 엄연히 유지되어 왔음.
- 당초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주로 월남자들이었음.
 - 월북자 가족들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은 저명한 인사들로 널리 알려진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
 - 대부분의 월북자 가족들은 감히 생사, 신원을 알아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음.
 - 월북자 가족들은 이 때까지만 해도 월북자의 존재를 알린다면 정상적인 시민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강박 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음.
- 북측 이산가족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월북자 가족들이었던 데도 남측과 유사한 사정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임.
 - 가족 내에 월남자들을 가진 북측의 이산가족들도 뿔뿔하게 그 존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임.
 - 그들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밝혀진 경우는 대체로 '반동분자' 내지 '반혁명분자' 가족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
 - 남북 양쪽의 체제 역량 차이에서 큰 열세를 느끼고 있는 북측 당국이 되도록 북측 체제에서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계층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선발한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임.
- 냉전 시대에 분단과 전쟁에 대한 책임은 남북 모두에서 정부가 아니라 주민이

깊어지고 있었음.

- 분단이란 민족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며 전쟁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책임은 정치 세력, 그리고 분단 과정을 통해 성립한 정부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6-25 전쟁에서는 남북 양쪽 주민은 자기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며 야기된 피해와 희생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것은 남북의 주민 개개인이었음.
-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쟁 피해 보상이 따르게 되며 전쟁 발발이나 전개 과정에서 해당 정부가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그 보상 의무가 따름.
- 내전으로 개시된 6-25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남북 양쪽 국가의 체제 정체성, 정치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이념의 역할을 해 왔음.
- 전쟁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자기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체제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떨 수도 있었음.
- 전쟁 과정에서 명백했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그 잘못을 따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음.
- 분단과 전쟁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남북 화해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함.
- 전쟁은 기본적으로 내전이었다는 점에서 남쪽에서 북쪽에 대해 전쟁과 관련하여 '전범'을 가려내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남북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그러나 남북 양쪽 정부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자기 구성원에게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분단과 전쟁으로 발생한 최대의 직접적인 피해는 사망 및 부상 등 인명 피해, 유무형의 재산 손실이며 이에 따른 교육 기회, 정상적인 생활 기회 박탈 등도 포함될 것임.
- 과거 전쟁으로 양산된 무수한 전제민,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의무였으며 남북 양 정부가 얼마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연구 과제임.
- 전쟁과 분단으로 입은 피해 및 희생으로서 아직 치유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남북 양 정부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청됨.
- 전쟁과 분단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이산가족의 발생임.
- 분단 및 6-25 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됨.
-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연한 국가적 책무가 됨.
-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 비용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음.

- 비용이 비싸게 드는 전시성 상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님.
-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남북 화해,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책임만이 아니며 분단 및 전쟁과 관련된 과거 청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현재의 남북 정부는 이미 분단 및 전쟁 당시의 정부가 아니며 그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님.
- 국가는 계속성을 지니며 그 책임과 의무를 계승하게 되어 있음.
- 북한 체제는 남쪽에 대한 체제 역량 상 열세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적극 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
- 탈냉전 상황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남북이 서로가 느끼는 어려움에 배려하며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함.

3. 상봉에 따른 과제

(1) 사실상의 국가 관계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성 부각

- 이산가족 상봉은 서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이며 분단으로 파괴된 가족이 복원되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가짐.
- 이산가족 상봉은 새로운 정치 상황적 의미를 띠고 있음.
- 헤어질 당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헤어진 가족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구성원으로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임.
- 분단 직후나 전쟁 기간에도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서로 다른 정치체, 국가로 인식하는 관념은 강하지 않았을 것임.
- 남북 양쪽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야기된 분단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리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임.
- 이산가족 상봉에 나온 가족들은 가족적으로는 반세기 전에 헤어졌을 당시 상태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 시점은 분단 이후, 전쟁이 끝나고도 50년 이상이 흐른 뒤임.
- 현재 이산가족들은 정치적, 사회적, 가족적으로 과거 헤어지던 상태와는 너무도 달라진 존재가 되어 버렸음.
-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냉엄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며 향후 남북 화해와 협력에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님.
- 남북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화국 공민이란 엄연히 서로 다른 정치적 실

체에 속한 구성원으로 만나고 있는 것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대한민국 국민은 서로 다른 정치적 존재임.
- 아직도 서로는 반국가단체, 반혁명조직으로서 규정하는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그 적을 바꾼다는 것은 원래 소속했던 국가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지님.
- 이산가족 사업에는 생사 확인-서신 교환-상봉-자유왕래-재결합 등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음.
 -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로 가능한 단계는 상봉까지라 할 수 있음.
 - 일부 보수층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나 재결합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자유왕래나 재결합을 운운할 수는 없음.
- 이산가족의 현실은 혈연적 관계만 가지고 서로 달라진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를 이어주기 어려움.
 - 가족의 복원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재결합으로 당사자들의 원망에 따라 원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만 매우 어려운 바램이 되고 있음.
 - 80년대 KBS의 남한 내 이산가족 상봉사업으로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났으나 이 때에도 재혼 등 달라진 가족 관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계층 차이가 큰 장애로 작용했음.
- 남북 간 가족의 만남에는 정치적 장애와 사회경제적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번 제1, 2차 상봉에서 일부 북측 가족이 언급한 '장군님' 찬양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음.
 - 남측 정치적 입장이나 관습에서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이 북측에서 하등 이상한 행동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관행임.
- 남북의 가족은 서로 다른 체제, 국가의 성원으로 만나고 있는 것임.
 - 가족적 혈연이 체제, 국가 차이를 넘어 설 수도 있으며 남녀간의 사랑이 냉전적 대립을 넘어서는 예를 보아 왔음.
 - 남북 양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러한 예를 적용할 수는 없음.
- 서로 다른 체제, 국가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한 남북의 헤어진 가족이 '집단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움.
 - 남북 양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음.
- 상봉 사업 과정에서 많은 예가 소개된 바 있음.
 - 어떤 부유한 노인은 북에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고 싶어해서 남에 있는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예도 있음.
 - 다행히 남측 자식들이 이를 용인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재산 상속을 할 수 있

는 것은 아님.

- 북측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있으며 불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 제도는 철폐되어 있음.
 - 남북이 합의 하에 이산가족 사업을 진전시키고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법, 호적법 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을 인정해야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함.
 - 위의 예에서 재산 문제는 차치하고 그 전에 자식으로 인지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헌법 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로 되어 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다른 국적보다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는 일방적 조치로 북측 당국이 인정할 리는 만무함.
 - 남측 못지 않게 북측에서도 상응한 법적 정비가 필요함.
 - 자유왕래 단계는 과거 동서독이나 현재 중국-대만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가족방문이 비교 대상이 됨.
 - 아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체제의 현상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은 대체로 남한 가족의 북한 방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임.
 - 북한 내부와는 일정하게 차단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는 면회소 설치를 통한 상봉 규모 확대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이 됨.
 - 재결합 단계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우선 남북 어느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유 의사에 따라 적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적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재결합에서 서로 다른 적을 유지하며 가족적인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남이든 북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공화국 공민이 자국 영토 내에 다른 적을 유지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이러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소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현된다면 이른바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될 것임.
 - 상당 기간은 체제 역량에서 열세에 있는 북측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북측 입장에서 체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고려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2) 연좌제의 소멸과 다양한 계층 현상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남측은 거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 북측은 인위적 선발 방식을 취함.
- 남북 양쪽의 체제 역량 차이에서 큰 열세를 느끼고 있는 북측 당국은 의도적인 선발 방식을 취함.
 - 월북자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한 북측 선발 방식은 의도했던 안 했던 냉전 해소에 적지 않은 새로운 효과를 발휘함.
 - 이는 월북자 가족을 그 동안 옥죄고 있던 심리적인 연좌제에서 해방시킴.
 -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과거의 '빨갱이 가족'은 북에 상당한 인물을 지닌 '자랑스러운 가족'으로 탈바꿈함.
 - 남쪽에서는 '불순분자'로 알려지기조차 꺼려했던 가족이 북쪽에서 출세를 하여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
 - 서로 다른 체제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가족은 상대방 체제에서 더 큰 피해를 당했던 과거에 비하면 냉전 관계가 전환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어떠한 분단의 피해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남북 관계에서도 엄연한 계층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현실도 드러내 줌.
 -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북쪽에서 높은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 남쪽에서도 대접받는 상황이 조성된 사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남북 관계에서 수평적인 계층 결합이 생긴다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남쪽 이산가족의 방북에서는 이러한 계층 효과가 좀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 대체로 남쪽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라고만은 볼 수 없으며 비교적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어느 정도 먹고 살 여유를 가진 계층이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으리란 점에서 대다수는 중산층 이상이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 남쪽 이산가족의 방북에서 남북 체제 역량, 주민의 생활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 영상에 비친 것처럼 북쪽 가족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연로해 보였고 행색도 꾸밈다고는 하지만 변변치 못한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음.
 - 준비한 선물이나 금전을 보더라도 그것이 미쳤을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 이산가족 상봉 사업 후 북쪽 실무자들이 남쪽 정부에 남쪽 가족이 북쪽 가족에게 많은 금액을 선사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
 - 남쪽에 가족을 가진 북쪽 가족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때 이는 사회적 계층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이미 북송 재일동포들로 일본에 가족을 가진 사람들 일부가 이러한 처지를 경험한 적이 있음.
 - 북쪽 정부 입장에서 재일동포 경우 수적으로 많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라는 점

- 에서 사회적 파장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남북 관계는 체제 안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고민에 봉착해 있으리라 여겨짐.
- 북쪽에서도 냉전적 상황에서 월남자 가족으로서 당해야 했던 심리적 억압이 해소되는 효과는 남쪽 못지 않게 컸을 것임.
 - 남북 가족의 관계를 유지되도록 허용하여 북쪽 내부에서 계층 상승 효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 주목되는 점임.
 - 남쪽 상황에서는 북쪽에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층, 사회적 신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남쪽에서 저소득층은커녕 남한 국민이 될 수 없었던 비전향 장기수의 재결합과 같은 전혀 다른 예도 있음.
 - 이들은 원래의 북쪽 공민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길을 택하여 북쪽 사회로 이전을 함으로써 완전히 신분 상승 뿐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음.
 - 남쪽에서 생활 보호대상자 정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이산가족 상봉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비합법적으로 남한을 탈출하여 북한으로 넘어간 소수의 '탈남자'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산가족 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책 마련이 요청됨.

정상회담 이후 언론의 대북관계 보도태도

영유부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1. 95.7%, “ 정상회담 성과에 만족한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은 50년 분단시대 마감을 예고하는 대사건이었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냉전적 질서는 도전받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후 우리 국민의 대북의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지난 2000년 6월15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94개 초.중. 고교 및 대학교의 학생, 교사 2천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같은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76%가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을 비롯, 북한을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1.3%,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에 62.1%, ‘남북화해에 도움을 줬다’는 대답을 한 사람이 80.3%로 남북회담이후 통일의식변화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한편 69.6%가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려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통일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취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인 95.7%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42.3%의 국민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설문의 응답자들이 통일이나 남북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는 신문, 잡지, 방송 83.8%, 학교교과서나 선생님 56.8%, 교과서 이외의 교양도서 17.6%,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 9.6%, 종교 및 사회단체 4.5% (복수 응답)순으로 나타나 언론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후 우리 국민의 대북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라 하겠다.

실지로 우리 언론은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화조짐을 보였다. ‘일부러 냉전의식을 강화하거나 대결의식을 부추기는 보도는 자제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방송은 정상회담 전부터 정상회담 관련 특집을 제작 회담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신문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을 뿐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대북적대적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2. ‘언론권력’의 정상회담 평가 - 정상회담 직후의 보도태도

(!) 트집잡기로 시작된 보도들...

남북 정상간에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시화하자 과거 대북 강경 논조를 잠깐 멈추고 이를 환영하며 통일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던 언론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은 '평화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자주'는 북한의 의도에 말린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수도 너무 적고 국군 포로 문제는 다루지도 못했다' 는 등 이것저것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6.15선언에 대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 이라고 평가했던 언론은 이제 '북은 왜 변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북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언론이 회담이후 그 성과를 폄하하고 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과거의 대결적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상회담을 이벤트성으로 받아들이다가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언론권력'이라고 까지 불릴 정도로 거대해진 언론이 통일과 기득권유지 사이에서 주판알을 튕기다가 '기득권유지를 위해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6.15선언을 가시화하는 평화조치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언론의 반복적 보도태도는 모처럼 조성된 통일의 호기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연일 사실과 칼럼을 통해 냉전시대의 논리를 재생산해 내고 있으며, 동아일보 역시 북한이 이회창 총재를 비난한 후 정부의 대북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대북대결적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같은 양 신문의 보도경향을 다른 신문들이 따라가는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남북대결구도 부추기기 뚜렷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적대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편 대북관계보도태도에 있어 언론사간 차별성도 뚜렷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과거보다는 조심스러워졌지만 북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겨레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망을 보도에 적극 담아내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선일보와 같이 북의 불성실과 이득챙기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심지어 성과까지 흠집내는 언론도 있다.

적십자회담의 경우 북이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신문들은 '정황설명 없이 단순보도해' 마치 북한이 '변덕을 부린다' 듯한 분위기를 조장했다.

동아는 6월 22일자 4면에서 판문점이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로 적절치 않다는 북의 주장을 보도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북측이 자연스럽게 회담을 주도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내용을 빠트리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24일 <'이산' 왜 꼭 금강산인가>와 29일 <적십자 일방통행 안되야> 등 2편의 사설에서 북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고 일방적인데 우리정부가 끌려다닌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북한의 속셈"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음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정부가 북측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 남북의 대결구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지적한 사설을 2회에 걸쳐 실은 반면 북측의 태도변화가 돋보였던 회담 성과를 평가하는 사설이나 칼럼은 없어 관계진전을 반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관급회담에 대해서도 경향, 동아, 중앙, 조선 등이 회담 전부터 '대표단의 격이 맞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격 안맞는 대표단 논란- 동아 7월28일 3면> <장관급 회담 격이 기운다-경향 29일

사설><남북 당국간 회담 격상하라-중앙 29일 사설> <당국자 회담의 어긋나는 첫단추- 조선 29일 사설>.

또한 날짜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 신문들은 여지없이 비판했는데 특히 중앙은 29일자 3면 기사에서 <김빠진 장관급 회담>로 제목을 달아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김'빠는' 기사를 실었다. 같은 날 조선일보 4면에는 회담 연기에 따라 대표단 플랭카드가 3번이나 변경되어 걸리는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며 회담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를 게재했다. 반면 한겨레는 <의외의 북 대표단>이라는 제목을 사용, 사실보도를 하면서도 선입견을 배제하는 보도를 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정작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들 중 일부 신문의 태도는 회담 전과 달랐다. 경향은 31일자 3면에 <회담꾼 전진>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국과 경향, 동아는 사족을 달기는 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지면에 담았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조선과 중앙은 군사적 문제와 경협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부각하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2) 신문별 보도태도 분석

1) 냉전시대로 시계바늘 돌리는 조선일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가장 냉전적 자세를 견지하는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흡수통일론적 주장, 대결구도 조장에 여념이 없는 반통일적 자세가 분명하다는 게 분석결과 드러났다. 물론 흡수통일론적 주장은 중앙 7월3일자 칼럼등 타 신문에도 나타나지만 일관되고도 강도높게 '분단'을 주장하는 것은 조선 뿐이다.

정상회담이전, '우호적 분단'을 제기,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하게 드러냈던 조선은 6월17일자 김대중 칼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간섭 없는 공존이며 한시적 분단"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주장은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의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 현실 인정은 분단 고착화일 뿐이라는 점에서 분단고착화를 오히려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비판,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는 반 조선일보 운동을 의식해서인지 7월 11일 <조선일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통단사설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남쪽에 의한 통일이라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곧 자신들은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를 거쳐 남북합의로 이루어가는 통일"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쪽에 의한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합의'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 방식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이는 북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민족의 장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평화와 공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결적 논리에 기반하여 주변적 사안을 확대보도하면서 사사건건 불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와 공존의 성립을 가로막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결적 논리로 북한 불신, '혼란' 과장, 이념 덧칠하기

6월 17일자 4면의 <북 도발 가능성 "없다"53% "있다" 38%>라는 기사는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 김위원장에 대한 시각, 통일의 시기 등 다양한 설문이 있었음에도 '전쟁'도발을

주요하게 다뤘다. 화해로 나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또 6월 21자 사설 <북 방송 "개혁 개방 없다">나 7월 13일자 시론 <북한은 변화했는가> 등은 북의 변화모습은 철저히 외면한 채 변하지 않거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만을 나열, 확대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월 22일자 <정치적 감상주의 안된다>는 칼럼이나 24일 <'주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라는 사설은 "북을 가상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이르면 이는 한국이라는 정치집단의 존재이유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6월 13일자 <남북정상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설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충고하던 태도와는 너무나 상이하다.

한편 북측이 범민족대회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의 논조는 아전인수격 논리 전개를 보였다는 지적. 7월 5일자 <범민족대회 분산개최가 뜻하는 것>이라는 사설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북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화해를 위해 범민족대회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그간의 연례행사들은 결국 화해보다는 투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자신들의 '이유있는 대북비판'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변화를 긍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을 들추어내 의기양양하여 비아냥대는 것은 분명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북의 기자 입북 거부와 이총재 및 조선에 대한 비방을 계기로 북과 정부, 반 조선일보운동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 발언은 수위가 높아졌다.

7월 13일 <"정상회담 후 국론분열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 더 심각"/이총리 "대북인식 일시적 혼란 불가피"> 이회창국회대정부질문을 1면 머리로 뽑아 정상회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 이어 3면머리로 <"안보의식 이완...새로운 교육, 철학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북경계심 해이를 지적한 후 북한의 남한비방내용만 뽑아 북은 여전하다는 주장을 담은 <북한은 변했는가>라는 시론을 실는 등 집중적 편집을 통해 대결적이었던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권층의 정신상태가 아무래도 이상"(7월 14일 사설 <청와대의 양비론>)하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11일자 <조선일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설과 14일자 <'조선기자들 암 발생 기쁜 소식'>이라는 김대중 칼럼은 조선일보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매도하거나 저주하는 주문"으로 일축하고 "북한 성명과 같은 맥을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남측의 비판과 북의 비판을 연계, 예의 이데올로기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북이 "남쪽내의 여론을 양분...북한과 관련된 남한내의 여러 견해와 쟁점에까지 좌지우지(7월 13일 사설 <남한 편 가르기 나선 북>"시키고 있고 "이미 남쪽의 어느부분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7월 22일 사설 <인공기 그리고 '돌아차 달라')>"이라며 사실을 부풀리며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전통보수는 2년뒤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정당에 투표하여 자기 뜻을 지켜나가려 할 것(7월 22일자 시론 <마주 달리는 진보와 보수>)"이라는 정권을 향한 위협아닌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 일련의 보도들은 정상회담이후 새로이 인식되는 대북관과 통일지향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냉전 이데올로기로 사회분위기를 주도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대북정보입수에서의 소외와 사회적 영향력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조선 고유의 반복의식이 결합되면서 반통일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선은 북과 남측의 화해세력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북에 내북 보내기나 돌보기 보내기 등의 민간운동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북보내기는 과거 용공시비의

대상이 됐던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7월 22일자 사회면 머리와 31일 <삼복에 웬 내북이나구요?>라는 시론까지 실어주는 등 매우 비중있게 처리했다. 북에 식량을 지원하자는 운동에 대해 군량미로 전용된다며 격렬히 반대했던 조선의 과거 행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철저히 주장하는 등 조선의 논조를 보면 인도주의적 정신을 회복했다가 보다는 반통일세력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일정 해소하면서 최근 문인과 지식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조선일보 운동을 의식, 반감을 줄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한국일보, 한 건 터트리기식 선정적 태도 두드러져

한국은 유독 김위원장의 답방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6월 24일 1면에 평양방송의 보도를 인용 <"김위원장 서울 방문 멀잖아">를 보도했던 한국은 7월 5일 박통일부장관의 말을 인용 <"김정일 답방 준비중">이라는 제목으로 1면에 실었고, 7월 15일에도 1면에 정형근의원의 주장이라며 <6개월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5면에 <"불속 답방 가능성"/정형근 의원이 분석한 김정일>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정의원의 주장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실현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보이는 것인데도 1면 머리가사로 뽑은 것은 답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의식, 특종을 노린 한건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방이라도 답방이 실현될 것처럼 보도하다가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북측에 원인을 돌리곤 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정부비판의 수위 높아진 동아

회담이전 지면할애나 의미부여등에서 소극적 보도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의혹이 솔렸던 동아는 회담적 후 잠시 성과를 인정하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의 이총재 비방발언 이후 정부의 태도가 문제 있다며 강한 비판을 유지하고 있다. 동아는 7월 14 사설 <청와대측의 이상한 시각>, 7월 13일 사설 <북한의 대남(對南) 비난>, 7월 17일 사설 <김대통령의 사려깊지 못한 말> 8월 3일 어경택칼럼 <이회창총재의 '원칙'>의 글들이 그것. 이총재에 대한 조언 성격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정상회담의 성과 퇴색시키는 중앙, 경험에는 관심 보여

노동당 규약 개정 관련보도로 자사기자의 청와대 출입이 일시 정지된 이후 비판적 논조가 보이고 6월 23일 권영빈 칼럼, 7월 4일 칼럼 <북에 뭘 얼마나 줘야하나> 7월 14일자 칼럼 <남북정상회담, 그후 한달> 7월 24일 <외투는 우리가 먼저 벗나>라는 칼럼과 8월 2일 김영희대기자의 <평화논의는 어디로>등의 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의 고수와 정체성 확립을 요구,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보인다. 특히 7월 3일자 <통일이데올로기>라는 칼럼과 7월 14일자 <남북정상회담, 그후 한달>이라는 칼럼은 남측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흡수통일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무기력이나 사회갈등을 부각시켜 정상회담의 성과를 퇴색시킨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은 전반적으로 경험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남북간의 교류분위기 조성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고 야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들도 보도해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지하는 조선,동아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5) 통일지향적 관점으로 일관된 한겨레

보수언론들이 선언의 의미를 폄하하고 북에 대한 일방적 시각을 보이고 있을 때 한겨레는 시종 화해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잘못 알려진 북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기획기사등을 통해 변화하는 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잘못 알려진 북의 실상을 알려내려는 노력 지속. 남북간에 해결해야할 실질적인 문제들 (대인지뢰 제거나 저작권 문제등)을 제기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교류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 2000년 하반기 언론보도태도 - 왜곡된 '비판의식' 돋보인 보도태도

1)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신문 방송 보도태도

(1) 떼거리 저널리즘으로 연일 대서특필 ----신문보도태도 08.10 ~ 08.22
일부신문 탄축 걸기 여전

작년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간에도 적대적이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자제되는 등 성숙한 태도로 한껏 무르익은 화해의 분위기에 촉매작용을 했다. 언론의 보도태도도 기존의 냉전주의적 시각과 체제 우월적인 시각으로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편협된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비교적 차분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는 평이다. 또 언론은 50년만에 처음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직접 만남을 경험한 이산가족의 애절한 사연과 눈물겨운 상봉의 장면을 민족적, 감성적 차원에서 신문지면을 통해 고스란히 담아냈다. 상봉시기인 15일-18일(신문지상에서는 16일-19일)은 모든 신문들이 1면에서부터 5,6,7면, 사회면 1,2,3면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얼룩진 감동의 드라마'를 한창 사연과 생생한 화보를 중심으로 많은 기사량을 쏟아내며 연일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라 해도 단순한 '눈물잔치' '감격의 드라마'로서 만 의제를 이끌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계모색과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감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제시에 대한 보도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또 여전히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들의 변화에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상봉의 의미를 폄하하는 신문들도 있는가하면 원론적으로는 이산가족상봉 그 자체는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만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꼬투리잡기로 본질을 훼손하는 신문들도 있었다.

이산가족상봉 보도태도에 있어 우리 언론은 한때 끓었다가 이후 보도에서 금새 사라지는 이벤트성 떼거리저널리즘 혹은 냄비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8월 16일자 각 신문 1면 기사의 제목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겨레 (8, 16 1면 머리기사) 《"서울도 평양도 울었다"》

(8, 16 2면 머리기사) 《"분단 녹이는 눈물...평화의 눈물로"》
경향 (8, 16 1면 머리기사) 《'핏줄의 만남' 남도 북도 울었다》
동아 (8, 16 1면 머리기사) 《남도 북도 울었다》
중앙 (8, 16 1면 머리기사) 《서울도 평양도 잠들지 못했다》
한국 (8, 16 1면 머리기사) 《'50년 한' 서울도 평양도 울었다》
조선 (8, 16 1면 머리기사) 《"내 아들이, 이제 왔니" "어머니 ..."》
(8, 16 3면 머리기사) 《100개 테이블마다 한맥힌 100가지 드라마》

이처럼 상봉 초부터 상봉이후까지 등장하는 사연들의 소개는 주로 위와 같은 표제와 감격의 포옹 사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봉초에는 '기쁨의 눈물'과 애절한 사연들이 신문지면을 채웠고, 상봉막바지에는 '아쉬움의 눈물'과 이별의 사연들이 보도되었다. 반면에 상봉이후에는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관련한 향후 방안이나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는 미흡한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상봉의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신문이 사실 및 칼럼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봉방식이다. 적은 상봉인원과, 제한된 시간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것으로 상설면회소 설치가 그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개의 신문들이 한 목소리였다.

한국일보 (8, 15 사설) 《서울, 평양 8·15 재상봉》
(8, 16 사설) 《분단 용어리 더 풀게 해야》
(8, 19 사설) 《'만남의 정례화' 시급하다》
(8, 19 25면) 《상봉형식 취재제한 아쉬움-이산상봉 문제점》

중앙일보 (8, 16 사설) 《상봉의 감격을 이어가자》
(8, 18 5면) 《"비싼 호텔대신 고향집서..." -남북이산상봉 풀어야 할 숙제-》
(8, 21 4면) 《'돈 덜 쓰는 상봉' 면회소 설치에 주력》 -이산상봉 개선 방향-

경향신문 (8, 16 사설) 《역사적인 8·15상봉》
(8, 17 사설) 《상설 면회소 설치 시급하다》
(8, 18 6면) 《"단 하루라도 고향성묘 시간줬으면..."》 -이산가족 기획좌담
①남측가족 -가정방문 허용 시간 너무 짧아
(8, 19 6면) 《"3박 4일 꿈꾸다 온 것 같다"》 -이산가족 기획좌담
②평양방문단

한겨레 (8, 17 사설) 《혈육의 정은 끊을 수 없다》
(8, 18 사설) 《이제는 통큰 결단 내릴 때》
(8, 21 사설) 《붓물처럼 터지는 요구와 현실》

조선일보 (8, 16 사설) 《이산이 만났다 겨레가 만났다》
(8, 19 종합 3면) 《'면회소'설치가 가장 급하다》 -8·15상봉 남은과제는- 등에서